

2023.12.21.(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장정욱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010-6788-5732

##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 명예회복 및 장례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2월 21일 (목) 13: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 분신사망 76일,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편히 모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21일(목) 13:4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권인숙 의원
- 주관 :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

### □ 진행순서

| 순서 | 순서      | 발언자                 | 내용지 |
|----|---------|---------------------|-----|
| 1  | 의원 발언 1 | 박주민 의원              |     |
| 2  | 의원 발언 2 | 권인숙 의원              |     |
| 3  | 유족 발언   | 고 방영환 따님 방희원        |     |
| 4  | 노조 발언 1 |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
| 5  | 노조 발언 2 |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 |     |

1)

※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 예정.

## □ 취지

- 택시노동자 故 방영환님이 ‘택시월급제 이행’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항거 후 사망하신지 7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훈그룹(해성운수)은 사과와 최소한의 책임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고인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해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음.
- 유족과 열사대책위는 동훈그룹 정\*\*일가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며 강서구청사거리와 정\*\* 자택 앞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음. 또한 동훈그룹 차고지 등 10개 거점에서 선전을 진행 중임.
- 둘째 아들 정\*\*가 구속된 뒤 뒤늦게 연내 장례를 위한 교섭이 재개됨. 그동안 정\*\*은 사과할 일 없다며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 왔고, 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확인해 기소송치 했음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려옴. 교인도 아니라면서 교섭 자리에 성경책을 들고 나와 추모기도를 하자고 비아냥댐.
- 그동안 언론을 통해 해성운수 외에도 은성택시 등 최저임금법 위반이 드러나고 있음. 은성택시는 근래에 서울시에 의해 2차레나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음. 하지만 동훈그룹의 만연된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법 위반 수사는 최근에야 소환조사가 시작되었음.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위반 조사도 최근에야 현장조사를 진행함.
-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동훈그룹의 고질적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아온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도 있음. “해당사업장에 불법은 없었다”며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악질사업주를 옹호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장은 반성하고, 시급히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함.
- 서울시는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행정처분으로,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 탓하지 말고 조속한 수사와 처분으로, 뒤늦었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권인숙 의원은 유족 및 열사대책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함.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동훈그룹 등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 사항>(21.3~22.6)

\* 서울시의회 제출 자료

○ 서면점검 : 임금협정서 등을 통한 서류점검

| 구 분 | 점검결과                          | 조치내역                |
|-----|-------------------------------|---------------------|
| 1차  | 254개 업체 중 234개 업체(약 92%) 미 준수 | 임금협정서 보완명령(1.29.까지) |
| 2차  | 36개 업체(약 14%) 미준수             | 임금협정서 보완명령(3.10.까지) |

※ 2차 보완명령으로 3개 업체를 제외하고 임금협정서 모두 제출

○ 현장점검 : 21개 택시업체 (민원발생 업체 18개, 임금협정서 미제출 3개)

- 주요 확인사항 : 운송수입금 전액입금하지 않고 기준액만 수납하였는지 여부,  
기준금 미달성 시 급여에서 공제 처리 여부 등

| 구 분 | 업체명    | 점검일시         | 조치내역      | 비고      |
|-----|--------|--------------|-----------|---------|
| 1   | **상운   | '21.3.25(목)  | 과태료 250만원 | -       |
| 2   | ***택시  | '21.3.25(목)  | 과태료 250만원 | -       |
| 3   | ***택시  | '21.3.25(목)  | 과태료 250만원 | -       |
| 4   | ****운수 | '21.3.25(목)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5   | *****  | '21.3.26(금)  | 과태료 250만원 | -       |
| 6   | **운수   | '21.3.26(금)  | 과태료 250만원 | -       |
| 7   | **택시   | '21.3.26(금)  | 과태료 250만원 | -       |
| 8   | **운수   | '21.3.26(금)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9   | 은성택시   | '21.3.30(화)  | 과태료 250만원 | -       |
| 10  | **택시   | '21.4.01(목)  | 과태료 250만원 | -       |
| 11  | **택시   | '21.3.26(금)  | 적발사항 없음   | -       |
| 12  | *****  | '21.3.25(목)  | 적발사항 없음   | -       |
| 13  | **기업   | '21.3.29(월)  | 적발사항 없음   | -       |
| 14  | ***택시  | '21.10.06(수)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15  | **운수   | '21.10.01(금) | 과태료 250만원 | -       |
| 16  | 호경운수   | '21.10.14(목)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17  | 은성택시   | '21.10.14(목) | 과태료 50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18  | **택시   | '22.6.09.(목) | 과태료 250만원 | -       |
| 19  | **교통   | '22.6.21(화)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20  | 동훈운수   | '22.6.27(월)  | 과태료 250만원 | 과태료 재판중 |
| 21  | **운수   | '22.6.14(화)  | 적발사항 없음   | -       |

※ 서울시 254개 택시사에서 21회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 가운데 동훈그룹에서만 4회가 적발됨.

# <은성택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처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 11. 11.

사건번호 2021년 형제34733호

수신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최성수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I.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고인 정승윤

직업 은성택시(주) 대표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죄명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없음

의견벌금 2,500,000(이백오십만)원

가납명령청구

### II.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검찰-2021-212-11534-BAD00249870755

2021-11-11

2021년 형제34733호

※ 동훈그룹 소속 은성택시(강서구 소재)에서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바 있음.

<해성운수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 적발>(2019년 하반기)

\* 서울시의회 제출 자료

2019년 하반기 운송비용전가 금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실태조사 총괄(서울시)

| 대상업체  | 조사업체 | 위반업체 | 행정처분 (단위: 만원, 건) |             |              | 비고 |
|-------|------|------|------------------|-------------|--------------|----|
|       |      |      | 과태료              | 사업일부<br>정 지 | 감차명령<br>면허취소 |    |
| 254개소 | 5개소  | 4개소  | 행정처분 예정          |             |              |    |

○ 세부 위반업체 현황

| 시도  | 시군 | 업체명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              | 비고 |
|-----|----|------|----------|---------------|-------------|--------------|----|
|     |    |      |          | 과태료           | 사업일부<br>정 지 | 감차명령<br>면허취소 |    |
| 서울시 |    | **기업 | 유류비 전가   | 과태료 및 사업일부 정지 |             |              |    |
|     |    | **교통 | 유류비 전가   |               |             |              |    |
|     |    | **택시 | 유류비 전가   |               |             |              |    |
|     |    | 해성운수 | 신차구입비 전가 |               |             |              |    |

※ 위 사항은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에게 신차구입비용을 전가해, 당사자가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적발된 것임.

# <동훈그룹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2018.2.28. 대법 판결)

\*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소식)

## 전국최초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

- 서울시, 시민안전 위협하고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도급택시 업체 첫 퇴출
- 2008년 최초 단속 이래 10년간 법적 공방, 특사경 지명 증거확보 노력 결실
- 허위증거에 이중장부 확인돼 감차처분 받고도 무더기 소송제기로 서울시 압박
- 최소면허 수 미충족으로 사업면허 취소처분...2018년 2월 대법원 판결로 퇴출 확정
- 택시 불법행위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할 것

□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끈질긴 단속과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결과물이다.

□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가 경찰청에 고발하여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업체 측은 업체와 기사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 이에 서울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를 수사할 수 있었다.

□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 해당 택시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하여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하였고, 2008년 서울시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2018. 2. 28.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 수사 담당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타 부서로 전출되었음에도 5년간 소송을 자진하여 수행하였고, 택시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시 적극 대응하여 승소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8-03-29

## 서울고등법원

### 제 7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7누447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신미운수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
| 제 1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7구합5203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6. 1.                           |
| 판 결 선 고   | 2017. 11. 16.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면허취소 대상 차량 목록' 기재 택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동훈그룹은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행정처분에 불복해 각종 소송을 남발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바 있음.